

# 창조경제와 창조산업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향**후 5년간 정부의 최고 화두는 단연 창조경제가 될 전망이다. 창조경제란 존 호킨스(John Howkins)가 2001년에 발간한 책 '창조경제: 아이디어로부터 돈 버는 방법'에서 기원한다. 이는 창조 산업 즉, 창의성, 기술, 그리고 재능이 토대가 되어 부와 직업을 창출하는 잠재력을 가진 산업으로부터 진화된 개념이다. 창조경제의 핵심에는 창조산업이 존재하고 있다. 최근 창조산업은 창조경제, 창조생태계로 개념이 진화하고 있다. 창조 경제의 대표적 정의인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의 개념정의에 따르면, 창조경제란 "소득, 직업 그리고 수출수익을 창출하는 잠재력을 가진 동시에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과 인간 발전을 촉진하는 -지적자본을 창출하고 유통하는 능력으로 표현되고 있는- 창의성, 문화, 경제 그리고 기술의 상호작용"을 가리킨다.

## 미래부, 한국형 창조산업의 조력자 역할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론은 이러한 개념으로부터 원형을 빌려온 것이 분명하다. 일자리 창출과 ICT 중심의 과학기술, 지식생태계 조성,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중소기업이 우선순위에 배치된 차이 정도이다. 흑묘백묘(黑貓白貓)든, 남귤북지(南橘北枳)가 되든, 중요한 사실은 박근혜정부가 새로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이를 채택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창조경제론의 중심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있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계의 권한과 책임은 커지고 무거워지고 있다. 물론 창조경제의 실현은 과학

기술계만의 숙제가 아니다. 모든 정부부처와 산·학·연 행위자 모두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이러한 구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의 밑그림을 그리고 이를 견인하는 주체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창조경제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의지는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인수위, 2013.2)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가 제1의 국정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창조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를 구성할 주체들의 고민은 이미 시작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성공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건들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선 개념적으로 창조경제란 용어는 과학기술 영역의 것이 아니다. 창조산업도 마찬가지이다. 영국정부의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DVMS)는 광고, 건축, 예술 및 골동품 시장, 공예, 디자인, 디자이너 패션, 영화, 상호작용 휴식 소프트웨어, 음악, 공연예술, 출판, 소프트웨어,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 13개 분야를 창조산업 분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로 유추해 볼 때 우리의 창조경제와 창조산업, 창조생태계는 한국형이 되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제부터 창조경제라는 거시적 그림만이 아니라 메조 수준의 한국형 창조산업을 설계하고 집행을 위한 컨설팅 및 조력자 역할을 준비해야 한다. 주어진 조건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조정과 조사분석평가, 미래성장동력의 기획, ICT(연구개발과



글\_이장재

KISTEP 선임연구위원  
과총 자문위원  
jjlee@kofst.or.kr

글쓴이는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국민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조지워싱턴대학 박사후연구원, 과학기술기본계획 기획간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산업 포함) 분야의 기획과 집행, 기초과학 및 거대과학의 기획과 집행 등이다.

### 국가 기획과 내외부 협업시스템 집중해야

이런 관점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분야로 국가 과학기술 기획 부문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미래예측 기능이 포함된다. 물론 기획은 집행 및 평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되고 지식이 축적되며, 이론화가 가능하게 된다. 지난 두 번의 정부가 평가를 강조했다고 한다면, 이번 정부는 국가기획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형태의 미래예측과 기획 전문가들과 관련 조직들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지원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한다. 기획관련 관료와 전문가, 그리고 전문가조직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형 창조경제와 창조산업, 그리고 창조생태계를 견인해 나가야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다음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어진 기능을 성공적·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외부 협업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나타난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은 앞에서 언급한 4가지로 크게 구분된다. 상호연계성이 결여된 채 서로 다른 논리로 운영되어온 기능들이 물리적으로 모여진 수준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내부 차원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경직된 관료조직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민간 전문가들을 통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 조직의 상중하수준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검증된 전문가들이 권한을 가지고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 것이다. 조직 외적으로는 각 부처에 미래창조과학자문관 제도를 설치하고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범부처적 미래창조과학자문관실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설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빅 데이터센터'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설치하고 각 부처의 관련 의사결정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명한 의사결정 및 협업을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권한 확보, 핫라인 구축, 포트폴리오 구성

세 번째로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권한 부여다. 한국형 창조경제와 창조생태계 조성이라는 막대한 기능

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준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국가과학기술정책 조정권 특히 연구개발예산 조정권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권한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한국형 창조경제와 창조산업을 견인하기 위한 기초연구에서부터 산업 원천에 이르는 연구개발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각 부처와 공동으로 관련 기술개발을 추구하기 위한 종자돈도 확보되어야 한다. 수요지향적 기술개발을 위한 협업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한국적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네 번째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폐지되고 국무총리와 대표 민간 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대안이 필요하다. 국가 최고 의사결정자와 과학기술계의 연계 고리가 단절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민간 위원장 체제인 형태로 복원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범부처적 컨설팅 트 및 조력자 기능을 고려한다면 대통령의 창조경제와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의지의 지속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적 차원에서 실현할 대통령과 과학기술계 간의 핫라인 구축이 요구된다. 다른 대안으로는 국가미래창조과학전략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설치하고 청와대 미래전략 수석이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전략과 정책의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구성이다. 현재 박근혜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그리고 창조생태계는 단종장기 차원에서 인력, 자원, 기술, 개방화, 국제화 등을 배분하고 관련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현재까지의 우려는 단기적 성과에 치중한 전략과 정책의 비중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후반기에 접어든 현재 국내외적 정치경제사회 및 과학기술 환경을 고려할 때 단기적 성과 위주의 전략과 정책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향한 균형이 유지되는 전략과 정책이야말로 한국형 창조경제와 창조산업, 창조생태계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의 초반부 현재 대한민국은 과거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고자 하는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국가적 지혜를 모아 이를 새로운 시대로 창조하는 것이 남은 과제이자 숙제다.